

“민간공원 특례사업 낱알이 공개하라”

광주경실련 “시민 검증·동의 받아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는 사업의 내용을 낱알이 공개하고 시민들을 위한 특례사업을 수행하는 데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보면 광주시민에 대한 배려나 편의제공은 없이 공원조성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우

려했던 것처럼 ‘광주의 특례사업은 일부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례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공원은 2020년 6월30일까지 공원집행이 되지 않으면 2020년 7월1일 공원지정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는 제1단계 4개 공원, 제2단계 5개 공원 등 총 10개의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1단계는 마루, 수랑, 송암, 봉산공원이며, 제2단계는 중앙1, 중앙2, 중외, 일

곡, 운암산, 신용공원이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부지에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광주경실련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였지만 지금도 미심쩍은 사항들 때문에 진실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제안서 접수 당시와는 다르게 사업타당성 검토라는 미명하에 아파트 건설 제비용과 금융비용을 터무니없이 변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제출한 제안서 내용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 낱알이 공개하고 모든 내용에 대해 시민의 검증과 동의를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다”고 말했다.

또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가 광주시의 분양가격 상승을 조정하거나 주택가격을 요동치게 하는 주범이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이에 광주시는 특례사업에 대한 분양원가와 공사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일몰제 시한에 역눌려 건설업자에게 끌려다니는 행태에서 벗어나 우선협상대상자 교체, 분양원가와 공사원가 공개, 검증시스템 마련, 시민 중심의 행정력 강화 방안 등 속칭 ‘플랜 B’에 대한 대책을 광주시가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뉴스1

인권위, 신고자 정보 유출 전남도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비리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 전남도 등에 기관 내 시스템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전남 A군 체육회 소속 B씨는 대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 전남도, 경찰서, 군체육회 등의 소속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으로 편취했다고 2017년 1월 경찰에 신고했다.



정확한인공호흡 요령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보건소에서 재년현장 신속대응반 및 응급의료반들이 응급처치교육을 받고 실습하고 있다.

광주시 가정폭력 증가율, 광역지자체 중 ‘1위’ 불명예

광주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증가 추이가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 가운데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는 2017년 891건에서 2018년 1215건으로 36.4%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부산시 1627건에서 2024건으로 24.4% △충남도 1367건에서 1700건으로 24.4% △경북도 1557명에서 1877명으로 20.6%가 증가했다.

최근 가정폭력 사건은 2016년 4만5619건에서 2017년 3만8583건으로 하락했지만 2018년 다시 증가해 4만1905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6월까지 2만1199건이 발생해 이미 작년 절반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 재발위험성이 클 경우 경찰이 취하는 가해자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긴급입시조치도 증가했다.

긴급입시조치는 2015년 2121건에서 2016년 1769건, 2017년 1183건으로 점차 감소했으나 2018년 1787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 수준인 173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이나 상해행위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5년~2016년 발생한 10만1054건 중 폭력 행사가 8만6043건(85.1%)이었고,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11만3509건도 폭행이 7만4826건(65.9%)을 차지했다.

폭행을 넘어 상해에 이르거나 집단 또는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특수폭행 등도 1만9480건(17.2%)에 달했다.

정인화 의원은 “가정폭력은 사회 구성의 기초인 가정을 파괴하고, 지라나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 자신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민원내용이 그대로 해당 군체육회에 전달됐고, 내부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와 감봉, 재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았으며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전남도의 관계자들은 “접수한 민원을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면서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고 해당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B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바리신고서와 민원 우편을 해당 기관에 그대로 이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 전남도 등에 기관 내 시스템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뉴스1

여름 휴가철 인터넷사기 4824명 검거

경찰이 휴가철 인터넷사기 단속을 통해 4824명을 검거해 145명을 구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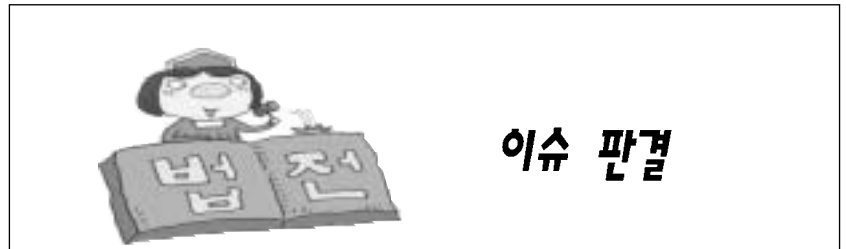
경찰청은 ‘하계휴가철 인터넷사기 단속’을 통해 물품거래 사기 등 1만6544건을 적발, 지난해 같은 기간(1만3376건)보다 23%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직거래사기 1만1448건(69.1%) △쇼핑몰사기 142건(0.9%) △게임사기 889건(5.4%) △이메일 무역사기 9건

(0.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 물품거래사이트에서 숙박권·캠핑용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허위 거래글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택배거래를 유인하고 대금만 받아 챙기는 방식의 사기가 많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면서 인터넷사기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만2636건 발생한 인터넷사기는 올해 7월 기준으로 7만711건을 넘어섰다.



“수영장 점프입수 위험성 경고 안한 광주시 배상책임 있다”

법원이 시립 수영장에서 점프입수를 하다 사람이 다친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고발생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광주시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오연수 판사는 A씨가 광주시와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와 B보험회사가 연대해 A씨에게 2732만1918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주시립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아왔다.

같은해 7월 말 A씨는 자유수영시간에 수영장 1번 레인에 설치된 도약대에서 점프입수를 하던 중 레인을 가로질러 수영하는 사람을 피하려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추 골절상을 입었다.

다른 수영장 이용객에 의해 물 밖으로 나온 A씨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해당 수영장의 수심은 1.2m에 불과했고, 각 레인에는 도약대가 설치돼 있었다. 특히 수영강습시간에 점프입수를 수업내용의 일환으로 편성해 지도했으며 강습생들은 자유수영시간에 자유롭게 도약대에서 점프입수를

연습했다.

수영장에는 2명의 수상안전요원이 근무 중이었지만 점프입수를 금지하거나 레인을 가로질러 수영하는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에 안전요원은 폐장시간이 가까워 마무리 정리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광주시가 위험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도약대를 설치한 점과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사고발생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볼 때 광주시는 수영장의 수심이 낮아 도약대를 이용한 점프입수를 할 경우 이용자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의 각 레인에 도약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시간에 점프입수 수업을 시켰으며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수업시간 외에는 도약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도약대를 사용해 점프입수를 하도록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공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세한 상담, 자문치료,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